



연구정책 동향 Brief

2023.5.1. ~ 12.

연구기획팀

대학 연구의 등불, 램프(LAMP) 사업이 밝힌다 [2023.5.4.]

- ◇ 교육부는 대학이 기초과학 분야의 새로운 지식 창출 중심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램프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 램프 사업은 기존 과제 중심의 연구 지원에서 벗어나 대학이 연구소를 관리·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학과·전공의 신진 연구인력이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2023년 지원규모는 8개 대학, 지원예산은 총 160억원이며, 선정 시 5년 (3+2년) 간 지원한다. 대학은 기초과학 10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해당 분야의 공동연구를 수행 (학과·전공별 칸막이식이 아닌, '주제(테마)' 중심으로 운영) 하게 된다.
- * 수리·통계과학, 원자과학, 천체·입자·우주과학, 분자수준과학, 나노단위과학, 물질·에너지과학, DNA·RNA 분자생물학, 진화·종의 다양성, 지구·해양·대기과학, 뇌·신경과학·기초의학

◇ 램프 사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학의 연구소 관리·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 대학이 '연구소 관리·지원 체계'를 우선적으로 갖추고, 연구인력 선발, 시설·장비 확충, 연구과제 확정 등을 직접 총괄

② 박사후연구원과 신진교원에 집중 지원

- 박사후연구원(포닥, post-doc)과 신진교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램프 사업은 젊고 유능한 박사후연구원의 유입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연구력을 보강할 뿐 아니라, 다양성과 새로움의 자극을 더해 대학 내 연구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임용된 지 7년 이내의 교원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역량 있는 신진교원들이 연구 잠재성과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기초과학분야의 혁신적 공동연구 지원

- '다양한 학과·전공 간 공동연구'를 지원하여 전략기술 개발이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새로운 지식 창출'을 추구한다. 대학은 선택한 기초과학 분야에 맞는 '전략적 공동연구 전체 과제수행계획(포트폴리오)'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국가 연구개발성과가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어 실용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이전·사업화·창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 낸다 [2023.5.2.]

-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이 6개 관계 부처 (과기정통부, 산업부, 교육부, 중기부, 기재부, 특허청)와 함께 마련한 「국가R&D 성과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4.28)에 보고하고, 각 부처는 이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국가R&D 성과의 활용·확산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 ①연구원 창업 및 창업 이후 성장·지원, ②창업을 위한 휴·겸직 허용기간 확대, ③특허 생산성 제고, ④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애로해소, ⑤공공(연) 기술이전방식 전면 개편, ⑥기술료 징수·납부·사용기준 완화 등 6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 그 결과 이번에 16개 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대표적인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공공R&D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업화 또는 창업활동을 위축하거나 이후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의무지분 보유비율 관련규제 개선) 관련 법령마다 상이한 자회사 주식 보유비율을 10% 이상으로 완화하여 통일하는 한편,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경우 총 자본금의 30% 현물(기술) 출자비율을 최초 설립할 때만 적용

② 우수특허 창출 등을 위하여 '특허가치 평가결과에 대한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미활용 특허처리 자율성 부여

- (우수특허 창출 지원 및 미활용 공공특허 관리) 질적 평가와 사전·사후적 특허 관리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R&D 평가 표준지침' 개정 및 '대학·출연(연) 연구지원체계평가'에 반영하고 특허포기를 포함하여 대학·출연(연) 등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유지·관리를 기관 자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③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징수, 납부 및 사용 등과 관련하여 연구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행정부담 및 혼란을 최소화

- (기술료 징수·납부·사용기준 등을 명확화) 매년 발간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 불확실한 점들을 명확하게 반영함으로써 연구현장의 혼란 및 불필요한 행정부담 경감

보건복지부

연구자가 꼭 알고 싶은 내용 답아...

'23년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개정 [2023.5.3.]

◇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에 관한 안내와 임상연구계획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 2차 개정판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 가이드라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법령·제도 등을 추가

- | | |
|------|--|
| [예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후에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조사·감독 등을 위해 각 실시기관의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운영하도록 안내▪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을 안내하고, 연구와 관련된 진료·치료의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발생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은 연구대상자에게 청구하지 못함을 안내 |
|------|--|

② 심의사례를 기반으로 '연구계획서 표준안'을 마련하고, 심의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 가이드라인을 보완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서 표준안'은 연구계획 목차 순서대로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든 서식으로 해당 목차의 작성방법, 예시 등 설명을 추가하여 연구자의 연구계획 작성 지원
- 그 외에도 대조군, 평가지표 설정 등 연구설계 시 고려사항과 시설·장비·인력 등에 관하여 작성 필요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

③ 연구계획의 심의를 신청할 때 접수요건과 연구계획 변경 절차 등의 개정된 심의 절차 안내

- 이번 개정으로 재생의료기관 외부 소속 인력도 연구책임자 외의 역할로 임상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연구 실시 장소는 연구계획 심의 신청한 재생의료기관 내로 한정하며 연구대상자도 해당 기관에 등록된 환자로 한정된다.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지침」개정판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서 표준안'은 첨단재생의료 누리집(www.k-arm.go.kr) - 알림마당에서 내려받기(다운로드)할 수 있다.